"인구 편중 행정기관 비효율 심화…조정委 구성 서둘러야"

국민의당 광주시당 광주 자치구간 경계조정 토론회

"인구만 고려 말고 자치구 역사·특성 반영, 갈등 줄여야" "인접 화순·담양·나주 등 연계, 장기적 관점서 접근해야"

심각해지고 있는 자치구 간 불균형 해소 와 선거 때마다 인위적으로 진행되는 선거 구 획정 등으로 제기됐던 광주 자치구(區) 간 경계조정 논의가 본격화됐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19일 오후 광주시 의회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무엇이 문 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4\cdot13$ 총선 이후 지역 정 치권에서 처음 마련한 공론의 장인 만큼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조정위원회 구성, 광주와 인접한 전남 시·군과의 연 계,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의 제안과 과제가 제시됐다. 오승용 전남대 연구교수는 구간 경계조 정을 위한 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 "경계 조정 대상 자치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만큼 자치구 의견을 반영 하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인사로 기 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광주 시장, 구청장, 국회의원, 정당, 경제계, 시 민사회 등 대표자가 참여해 큰 틀의 합의 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칭 구간 균형발전을 위한 경계조정위 원회를 광주시장 책임 아래 구성하고 '균 형발전 및 도심 공동화 대책', '인구 및 재 정 대책', '구간 경계조정 실무' 등 3개 분 과를 둬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방안

■구별 인구 현황(2015년 기준)

동구 46.153 101.833 2.2 18.919(18.6%) 43.6 2.070 49.2 서구 119.658 311.985 2.6 32.286(10.3%) 37.9 6.528 47.79 남구 85.996 221.120 2.6 29.591(13.5%) 40 3.626 60.99		세대	등록인구 (명)	세대당 인구(명)	65세 이상 (인구대비비율)	평균연령 (세)	인구밀도 (명/k㎡)	면적(km²)
서구 119,658 311,985 2.6 32,286(10.3%) 37.9 6,528 47.79 남구 85,996 221,120 2.6 29,591(13.5%) 40 3,626 60.99	합계	573,044	1,492,948	2.6	159,822(10.7%)	37.96	2,979	501.18
남구 85.996 221,120 2.6 29.591(13.5%) 40 3.626 60.99	동구	46,153	101,833	2.2	18,919(18.6%)	43.6	2,070	49.2
	서구	119,658	311,985	2.6	32,286(10.3%)	37.9	6,528	47.79
북구 176,440 451,936 2.5 49,182(10.9%) 38.6 3,757 120.3	남구	85,996	221,120	2.6	29,591(13.5%)	40	3,626	60.99
	북구	176,440	451,936	2.5	49,182(10.9%)	38.6	3,757	120.3
광산구 144,797 406,074 2.7 29.844(7.3%) 34.7 1,822 222.9	광산구	144,797	406,074	2.7	29,844(7.3%)	34.7	1,822	222.9

을 제안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행정구획 조정 논의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촉발됐지만, 선거구가 행정구역과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와 행정구의 경계를 일치시켜야 할 논리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행정구역 조정은 점차 경제활동의 상호작용이 커지는 주변 지역 예컨대 전남 화순, 나주, 담양 등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 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춘수 광주시의회 부의장은 "선거를 앞둔 인위적 선거구 회정은 표심을 왜곡하 고 주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 다"면서 "인구만을 고려해 생활환경이 다 른 지역과의 통합으로 갈등을 유발해서는 안된다"며 자치구별 역사와 특성을 고려 한 경계조정을 주문했다.

김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은 "자치구 간 인구 편중이 심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나 구립시설 이용 효율성 등에서 비용과 투자 대비 비효율이 나타날 수 있다"며 행 정기관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 고 정치적으로나 주민 사이 갈등을 방지하 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오늘 참석자 대부분이 경계조정의 필요 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많은 논의 속에 중·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만, 내년 상 반기 중에는 1차 경계조정을 진행할 수 있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19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당직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구간 경계조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도록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속도감 있는 구간 경계조정을 시사했다.

또한, 김 위원장과 박주선 국회 부의장 은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에 대해 이연 광주시 자치행정 국장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 주민편의 제 공, 국회의원 정수 유지 등 다양한 관점을 공유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계조정의 주체인 광주시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간 경계조 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광주에서는 2011년 10월 1일 동구산수 1·2동이 북구로, 북구 풍향동 일부등을 동구로편입하는 등 경계조정이 있었고, 지난 4·13 총선 전에는 국회의원 8석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동구와 남구, 북구갑·을 지역이 재편돼 일부 논란이 생기기도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위험성 결과 나올때까지 원전 신설 중단을"

더민주·국민의당, 경주 지진 계기 정부 원전 정책 맹폭

국내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던 경주 지 진 발생을 계기로 야당이 박근혜정부의 원 자력 발전소(원전) 정책을 질타하며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민주 지도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현 정부 원전 정책을 비판한 뒤 당내에 원자력안전점검대책특별위원회(약칭 원전안전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최인호 최고위원이 맡고 당내 인사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17명으로 구성했다. 특위는 이번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원전주변지역 단층대 정밀조사 추진 ▲원전 내진 설계기준 강화 및 보강 등 안전한 원전 가동을 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 전은 안전한데 원전 인근 지역은 특별재 난지역으로 선포한단 게 무슨 말이냐"며 "경주를 포함한 원전 인근 지역은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원전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이런 말이 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최인호 위원장은 "노후화됐고 30년이 넘어 수명을 연장하는 고리 ·월성 1호기 등 노후화 원전 즉각적 폐쇄 검토 필요하 지 않으냐 주민들 걱정 정부가 바로 새겨 야 될 것 같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 은 현재 진행되는 위험성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즉각 중단하는 게 맞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심기준 최고위원도 "원전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며 원전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경주 지진과 관련,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국민에게 실망을 안겼다"며 원전신설 전면재검토 등 원전정책전환을 요구했다.

주승용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며 "한 번 사고가 나면 크나큰 재 앙이 될 수 있는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 에 대비한 내진설계가 됐다는데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비대위원은 "전문가들은 월성 원전과 고리·신고리 원전이 있는 경주·울산·부산 지역에 활성단층 60여개가 분포한다고 한다"며 "양산단층처럼 140㎞에 달하는 대규모 활성단층이 8개 존재하는데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 원전특위를 구성해 기본적인 원전정책 재검토와 지진·해일·홍수·원전폭발 대비, 방사능 누출 보안, 사용 후핵연료 재처리·폐기, 노후원전 해체 등원전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민의당, 당원투표 $80\% \cdot$ 국민경선 20%로 대표 선출

당규 개정안 22일 확정

국민의당이 당 대표 선출 시 전 당원 투표와 함께 전체 반영비율의 20% 내에서 국민참여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최근 당헌당규제개정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당규개정안을 만들고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거쳐 다음주 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한・당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정규계정원들 확성을 예정이다. 당규 개정안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및 지지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전체의 20% 이내에서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나 여론조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에서 전 당원 투표를 하되, 일반 국민

국민의당 관계자는 19일 "사실상 전 당원 투표 80%, 국민참여경선 20%로 대표를 선출하는 안"이라며 "국민참여선거인단 및 여론조사 비율은 전대준비위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당원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 하는 당원투표요구권은 전체 당원의 20%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되도록 했다. 당 원투표요구권은 전체 당원이 당의 중요 정 책과 사안을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 리를 부여한 제도다.

한편, 대선후보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당헌에 국민참여경선으로 명시된 가운데 그 방법 즉, 전당원투표제와 국민경선 비율, 나아가 여론조사를 활용하는지 선거 인단을 구성하는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전 첫으로 필터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민주당 흡수 이어 이해찬 복당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원외 민주당 흡수에 이어 이해찬 의원의 복당 절차에 돌입하는 당하면 통합 분위기를 잡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더민주는 1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 13 총선 과정에서 공천배제에 반발, 탈당 한 이해찬(7선·세종) 의원의 복당을 결정했다. 지난 3월15일 탈당한 지 188일 만이다. 이 의원은 총선 직후인 4월19일 복당신청서를 냈지만,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는 복당이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더민주는 지난 7월 지역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이 전 총리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위원장 자리를 비워두기로 결정, 복당의 길을 튼 바 있다.

전날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 결의에 이어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좌장격인 이 의원 의 복당을 통해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는 양대 축으로 대변돼온 전통 적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 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Ι www. HanaTour.com